

우리의 정보미래, 장미빛인가

지식 정보산업의 도약을 위한 몇 가지 제안

박태경

문화일보 국제부 기자

몇해전 일본의 한 전문기관이 선진 각국의 정보 흡입량과 방출량을 조사한 적이 있다. TV는 10, 영화는 8, 신문은 7, 단행본은 6, 잡지는 5 하는 식으로 매체별로 가중치를 두어 1년 동안 각국이 국제사회에 얼마나 가장 많은 정보를 방출, 흡입했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정보 방출에서는 미국이 1위, 정보 흡입에서는 일본이 1위였다. 역시 경제 대국은 정보대국이기도 했다.

재치있는 이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한 나라의 국력은 '정보'라는 제3의 잣대로 측정가능하다. 어찌 보면 이런 조사방식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생산성 같은 종전의 잣대보다 한 나라의 지적 깊이나, 발전 가능성을 추정하는 데 보다 적합한 잣대일 수도 있다. 이같은 잣대로 우리나라의 정보 흡입량과 방출량을 조사한다면 그 수치는 얼마나 나올까. 추정컨대 1인당 GDP 랭킹을 앞서지는 못할 것이다.

추상적 관념에만 머문 '정보화' 시대

지금까지도 "정보는 힘"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초정보혁명의 해일이 밀어닥치면, 정보는 더이상 비교할 상대가 없는 절대파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무한대의 정보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한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초정보시대가 열린 것이다. 패기있게 '정보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중인 앤 고어 미국 부통령이 "쏟고 있는 95%의 미국정보를 각계가 제대로 활용하게 만들면 21세기에도 미국은 변함없이 세계 초강국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화시대 대비'가 추상적 관념 또는 립서비스 차원에 머물러 있다. 첨단 반도체칩을 양산하는 것을 정보화로 알거나, 아이들방에 컴퓨터를 들여놓으면 정보화시대에 앞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정보화의 도래는 칩이 아닌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대학생들과 같이 자리할 기회가 있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정보혁명의 현황과 미래상이었다. 한창 이야기가 오갈 때였다. 한 학생이 자신은 최근 정부 및 기업이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정보화의 장래에 대단히 비관적이라고 말해 주위의 이목을 모았다.

"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지금까지도 정보는 '힘'이었지만,

앞으로 초정보혁명의 해일이

밀려오면 정보는 비교상대가 없는

'절대파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우리 사회에서는

'정보화시대 대비'가 추상적 관념에만

머물러 있다. 단언컨대 현재 우리는

정보후진국이다. 그 오명을 벗기 위한

총체적 노력으로 장미빛 21세기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제 경험입니다. 교육 정보혁명의 포대는 도서관이라는 게 상식 아닙니까. 서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교내에 광통신망을 깔고 도서관 자료를 디지털화해, 강의실이나 기숙사에서 언제든지 이용하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접한 현실은 그런 것과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광통신망이나 전자도서관 같은 것은 꿈 같은 먼나라 이야기이고, 활자서적들조차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케케묵은 옛날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도서분류 조차 제대로 안되었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때 노동운동가가 쓴《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는 고전이 과연 어디에 꽂혀 있는지 아세요? 엉뚱한 금속학 코너에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 금속제련법 따위를 다른 책인 줄 안 겁니다. 이는 도서관측이 책을 분류할 때 표지 조차 들춰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기초가 전혀 안 잡혀 있는데, 정부가 광통신망 구축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어봤자 뭐합니까."

한국 정보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낯뜨거운 증언이었다.

고전적 활자문명의 토대가 굳건해야

이 학생의 이야기는 정보화에 대한 많은 화두(話頭)를 담고 있다. 아직도 '제조법 마인드'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는 우리 사회는 한꺼번에 천문학적 거액을 투입해 첨단 생 산라인과 광통신망, 위성망 등을 깔면 정보선 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다. 그러나 큰 착각이다. 본디 최첨단 정보문명은 출판이나 도서관 같은 원시적이며 고전적인 활자문명의 토대가 굳건할 때에만 창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인문사회과학과 기초 자연과학이 충실히 발전하고, 그 성과물이 책이란 형태로 활발히 출간되고, 또 그 책들이 도서관 등에 빼곡이꽂혀 있을 때만 비로소 기술문명은 활짝 만개할 수 있는 법이다. 이런 토대없이 문명의 도약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도둑놈 심보이다.

미국같은 정보대국에는 예외없이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비상업적 기초학문 전통을 위해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한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미국 등에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출판물이 나오면, 정보나 지방단체가 곧바로 그 도서를 상당분량 구입해 와 국립, 공립도서관과 주요기관 등에 배치한다. 이러다보니 출판사들은 상업성이 적은 양서 출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며, 이는 곧 왕성한 집필·출판·독서라는 지적 활동으로 이어져 '지식산업의 브네상스'와 '창조적 정보문화 창출'을 가능케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는 어떤가. 전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몇년째 이 법안은 선량들 관심 밖으로 밀려나 서랍 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출판산업의 위축, 지식산업의 무기력화, 독자층의 냉소 같은 작금의 총체적 지식산업의 위기는 이같은 정치집단의 직무유기와 무관하지 않다.

때로는 한가지 통상을 해본다. 단번에 출판과 정보산업이라는 양대 지식산업을 함께 도약시키는 묘안은 없을까.

사회적으로 신망높고 전문성도 뛰어난 각계 인사들로 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연간 1천종의 도서를 추천도서로 선정한다. 그러면 정부는 즉각 가칭 '정보진흥법'에 의거해 이 도서들을 1종당 2천원씩 의무구입, 국공립도서관과 각 기관 자료실, 대학도서관, 고등학교도서관, 시립도서관 등에 배치한다. 이럴 때 소요되는 예산은 도서 1권당 구입비를 평균 5천원으로 잡으면 연간 1백억원, 연 예산이 70조원에 육박하는 정부로서는 넉넉히 감당할 만한 액다.

정부는 이처럼 출판계를 대신, 그들에게 한가지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요즘 원고는 거

개가 컴퓨터로 디스크에 담겨져 출판사에 전해진다. 정부는 이 디스크 사용권을 확보, 이를 토대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한 뒤 각 PC통신망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한다. 현재 구미에서도 전자도서관 구축은 이용도 높은 최신정보를 담은 서적부터 해나가고 있다. 정부가 출판사로부터 이미 디지털화가 끝난 디스크을 통째로 인수할 수 있다면, 전자도서관 구축을 그만큼 비용도 적게 들고 그 시기를 혁명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정보후진국을 벗기 위한 노력 필요

이런 생각은 현단계에서 통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와 의회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연간 1백억원의 투자로 지식산업의 중흥과 전자도서관의 구축이라는 초보적 단계이긴 하나 대단히 중차대한 두마리 토끼사냥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많은 양의 정보를 만지는 신문, 방송, 통신들도 할 일이 많다. 세계 4대 통신 중 하나인 로이터통신은 1천5백여명의 기자와 카메라맨이 모아온 정치, 경제 관련 정보를 분류정리한 뒤, 이를 '현대사 전자교과서'로 만들어 초중고교에 공급하고 있다. 각 뉴스에 관련되는 인물의 프로필, 지도 등 참고자료를 덧붙여 디지털화한 이 전자 교과서는 그날 그날 PC통신망을 통해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각 학교에 보내져 수업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로이터의 작업을 부러워할 때만이 아니다. 단언컨대 현재 우리는 '정보 후진국'이다.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 전사회가 오명을 벗기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일 때만 비로소 21세기는 환한 빛으로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